

173분간 25개 질문 답한李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 의지
北 비핵화 이상적이지만 당장 어려워
종교계 정치개입 문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무려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을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90분보다 2배 가량 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관심을 끌던 이슈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본인의 악연을 소개하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뭐든지 믿고 믿을 수 없는 ‘마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 것도 하지 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저해되더라도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

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검찰청 폐지 시점인) 10월까지의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 견디자’였다.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에서 지적한 민간 무기 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치도 하고 있지만 (북한) 반응이 없다”며 “그 와중에 무기

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때는 엄중한 사안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종교계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이걸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래 처벌 법률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마치 권리인 줄 아는데, 개인이 정치적 선호와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해명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감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며 “기사처럼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용인 반도체 이전 부탁한다고 되지않아”

》1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서 계속

신규원자력발전소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전 문제를 포함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

스터’와 관련해 기업 입지 문제를 두고 전력이나 용수 등에 관련한 갈등이 생기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 기업들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기업 이동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이나 용수 문제 등을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이혜훈 청문회 불발되나… 여야 여전히 대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지나
李 대통령 “본인 얘기 들어봐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에도 여전히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의혹을 검증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과 전신 정당에서 총선 공천을 여러번 받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입각하려고 하나 나마를 목표로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은 재경위 간사에게 청문회 개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19일 청문회 정회 이후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재경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부정청약 의혹과 증여세 의혹 등에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요청한 91개 자료 중 (부정청약 관련) 장남의 (결혼 이후) 실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거주 여부, 증여세, 자녀 유학 중 해외 송금내역 자료 등을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내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논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기사가 자신들의 흥

보 기회를 덮을 우려가 있어 오늘과 내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며 “모레(금요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여야 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은, 본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본 뒤 결정하고 싶었다는 것”이라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특위, 원내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청문회를 해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단식 일주일’ 張… 강성충 중심 결집 분위기

한동훈 제명 결정 잠시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민주당 공천헌금 수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되는 21일, 단식 전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당이 강성파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결집 효과를 누리는 모양새다.

단식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 대표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밤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부터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낮아져 의료진이 의료기관 긴급 이송을 권고했으나,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활용해 단식현장에서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심하라.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며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방안을 강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초선·비례 의원이 송 원내대표와 회동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비상의를 제안했다. 장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다.

/뉴시스

건강이 너무 악화됐는데, 국회에서 안 나가신다. 병원에 가서야 한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며 “의료진은 3~4일 전부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죽음을 걸고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뭐 하고 있나”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 대전환’ 하면서 또 다시 말 잔치하고 있다. 흑세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부수석이라도 보내서 우리 야당 당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고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